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1-3호

발행일 : 2021. 11. 30. (화)

제391회 국회(정기회, 2021. 9. 1. ~ 12. 9.)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은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적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드론산업 육성

나. 고용 · 노동에서 성평등

다. 국방개혁 2.0

라. 강제적 섯다운제 폐지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의 출처는 링크된 원문의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1. 개관

제391회 국회(정기회)는 9월 1일부터 시작되어 100일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10월부터 국정감사 및 예결산 심의 등으로 법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는 11월 11일에야 열렸습니다.

11일에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10년 만에 ‘강제적 섯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세무사 등록 규정에 대한 입법미비를 보완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3)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4)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 주택금융상품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6)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을 규제 대상인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명시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지의 지난 호에서 다룬 정책이슈 중 ‘데이터 경제’와 관련하여 볼 필요가 있고, (7) 지방 재정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일련의 입법으로서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개정법률안도 본지 지난 호에서 다룬 ‘국가균형발전’ 이슈와 연계되고 있습니다(입법정책브리핑 제2021-2호 참조).

이번 국회(정기회)의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56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정무위원회(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등 17인
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의원 등 10인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의원 등 10인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9	기획재정위원회(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0	국방위원회(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의원 등 11인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1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1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15	행정안전위원회(7)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1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18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양향자 의원 등 19인
19	문화체육관광 위원회(1)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20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2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22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16)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23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2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 의원 등 10인
25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등 10인
2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의원 등 28인
27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의원 등 10인
28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2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의원 등 10인
3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의원 등 17인
3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의원 등 10인
3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의원 등 10인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33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1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 의원 등 10인
34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의원 등 12인
3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36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
37	국토교통위원회(1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 의원 등 15인
38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3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의원 등 10인
40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 의원 등 12인
4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현 의원 등 10인
4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의원 등 17인
4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의원 등 18인
4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의원 등 10인
45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4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 의원 등 12인
4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의원 등 12인
4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4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5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의원 등 11인
5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등 12인
5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5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5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55	여성가족위원회(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5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드론산업 육성, 고용·노동에서 성평등, 국방개혁 2.0, 강제적 섯다운제 폐지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드론산업 육성

개요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채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를 뜻합니다. 드론산업은 혁신성장의 8대 핵심 선도사업으로 항공·정보통신(ICT)·소프트웨어(SW)·센서 등 첨단기술의 융합산업이기도 합니다.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드론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물품수송, 산림보호 및 감시, 시설물 안전진단 등 시범사업 분야를 확대하고 규제샌드박스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본회의에서는 드론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드론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국토교통위원회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드론산업이 소방·방재 등 공공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육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이 소방·방재·방역·보건·측량·감시·구호 등 공공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안 제3조제2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안 제17조 제4항 신설).	2021-11-11 (원안가결)
2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계획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 제3항 신설).	2021-11-11 (원안가결)

3	국토교통위원회	<p>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현재 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체 안전 관리 업무에 대한 전담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시스템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조정하여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p>	2021-11-11 (원안가결)
---	---------	---	----------------------

정책 동향

[100대 국정과제]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산업부·과기정통부·국토부·복지부)

과제목표

제조 경쟁력과 ICT, 서비스 등의 융합을 통해 미래형 신산업 육성

주요 내용

(친환경·스마트카) 전기차·수소차 획기적 보급 확대, 자동차-ICT융합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카 개발 및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첨단기술 산업) 융복합 추진전략 마련, 반도체·디스플레이·탄소산업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첨단 신소재·부품 개발

(제약·바이오 등) 핵심기술 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제약·바이오·마이크로 의료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

(자율협력주행)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인프라, 자율협력주행 커넥티드서비스, 스마트도로 등을 구축하고 '20년 준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

(드론산업)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 로드맵 마련('17년) 및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기술개발, 융합생태계 조성 등 추진

(표준·인증) 신속인증제 운영 활성화, 범부처 TBT대응지원 센터 운영, 신속표준제도 도입 등 신산업 표준·인증제도 혁신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17~2026)

목표 및 전략

드론산업 육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성장동력 창출

주요 내용

(사업용 중심의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용 드론 특화로 국내외 시장 점유율 2배 이상 제고, 융합생태계 조성을 통한 세계 10위권 강소기업 육성

(공공수요 기반으로 운영시장 육성) 공공수요 창출(3.5천억 원)을 통한 초기 성장동력 확보, 조달 혁신, 민관협력을 통한 국산 도입율 제고(90%)

(글로벌 수준의 운영 환경 및 인프라 구축) 미래 유무인 통합공역 운영, 드론 교통체계(UTM)정립, 스마트 드론 관리시스템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구축, 100만 드론 시대에 대비한 드론 안전체계 확립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한 세계시장 선점) 글로벌 Top5 진입을 위한 핵심 · 실용화 기술 개발 확대, 시장 확대에 대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해외진출 지원

관련 :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17. 12. 21.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추진배경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제시의 두 번째 분야

주요 내용

- △ 비행기술(조종 비행→자율 비행) △ 수송능력(화물 탑재→사람 탑승) △ 비행영역(인구희박→밀집지역) 등 3가지 기술 변수를 종합해 5단계 시나리오 도출
 - 발전단계별 규제이슈 총 35건 발굴 · 정비 (활용과 안전의 균형 도모)
- △ 국민안전(19건) : △ ‘하늘길 신호등’(드론교통관제시스템, UTM) 도입 △ 드론공원 확대 및 드론비행 정보 시스템 구축 △ 드론 성능 분류에 따른 조종자 자격기준 · 기체 등록기준 개선 등
- △ 활용 (16건) : △ 드론 비행특례 규제완화 및 드론항공촬영 절차 완화 △ 시설점검 · 측량드론 위한 영상정보 수집 · 활용 허용 등 △ 드론택시 대비 사람탑승 안전기준 마련
 - 수소 · 전기차, 에너지신산업 등 타 분야로 확산 적용(2020년 발표)

관련 :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드론분야-](#) 관계부처 합동 2019. 10. 16.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도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5세대(5G) 이동통신을 활용한 비가시권 · 군집비행이 가능한 드론운영 기술개발, 육 · 해 · 공 공통 적용이 가능한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및 통합운용 실증 등 혁신적인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이 새롭게 추진된다.

- ①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이 새로이 추진(’20~’26년, 1,702.8억 원)
- ②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기술개발’ 지속 추진
- ③ ‘DNA+ 드론기술개발’ 추진(’20~’24년, 450억 원)

관련 : [2020년도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12. 27.

[2021년도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등 통합문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12. 29.

참고 자료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1. 3.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0. 1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1. 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1. 6.

[안티드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2021. 8. 18.

드론을 탐지하고 피아식별 후 저지·파괴할 수 있는 안티드론 기술이 주목받고 있음. (...) 정책 제언: 드론의 위협이 물리적 영역에서 사이버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으로 국내 관련자의 관심 및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 기술 상용화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ADD 및 출연연이 기업에 기술이전·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 실증 데이터 축적·검증을 위한 인프라 개방. (...) 국내·외적으로 표준화된 인증이 없으므로, 국산 기술 개발 R&D 성과물을 기반으로 국제 표준 기술·지침·활동 필요. (...) 드론 신고제에 대하여 홍보 및 교육이, 드론 유형에 따라 국가 드론교통관제체계(UTM)와 통신이 가능한 전자식별 체계 의무화가 필요하고 불법드론 적발 시 조치해야 하는 행정절차 통합 및 간소화. (...)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은 불법드론으로부터 국가 주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므로 안티드론 기술사용을 폭넓게 허가하되 요격 기준 및 2차 피해 보상 등 법제도 구체화.

[드론 관리체계 개선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1. 4. 22.

드론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기체 신고 의무와 조종자격을 강화하여 관리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각각 2021년 1월 1일과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드론 활용 시 안전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드론 조종자격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비사업용 드론의 보험 가입 의무화와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처벌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 '드론'관련 민원 1,276건 분석, 제도개선 착수](#) 국민권익위원회 2020. 7. 30.

'드론'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비행승인, 비행구역 완화, 드론비행장 확대 등 '드론 활용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이 37.0%로 가장 많았으나, 소음·사생활 침해 등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도 30.8%를 차지하고 있어 드론 활성화 정책 추진과 함께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 보완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드론산업의 빠른 성장과 함께 다양한 측면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제도와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가 갖고 있는 국민소통·갈등조정·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 \(2차\)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 7. 31.

사업목표를 사업 시행 이전에 명확하고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객관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방안과 동 사업 이후의 파급 과정에 대한 성과지표의 보완이 필요함. (...) 과제별 최종 목표의 도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사업수행 주체별로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고 서로 간에 연

계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무인이동체 관계부처 협의체의 활동은 비단 동 사업만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무인이동체 전체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므로 과기정통부가 중심이 되어 관련 부처와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장기적·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나. 고용·노동에서 성평등

개요

성평등 정책은 정부·지자체 정책의 성주류화와 사회 전반의 실질적 성평등 실현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 한편 경력단절을 막는 것이 중요하데, 경력단절과 관련하여 정부는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평등한 일자리 지원을 통해 경력단절 예방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성평등한 일자리 지원은 지역사회와의 협력 속에 이루어집니다.

이번 11월 본회의에서는 고용과 노동 영역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안으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이러한 정책과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여성가족위원회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전부개정하여 정책 대상을 취업 여성으로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021-11-11 (원안가결)
2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의 목표, 책무, 기본계획 등에 양성평등의 증진과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 여건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 여성농어업인의 날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등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어촌사회의 양성평등 확대와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021-11-11 (원안가결)

정책 동향

[100대 국정과제]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여가부)

과제목표

성평등 정책 총괄 · 조정기능 강화, 민관협치 등을 통해 성평등 문화 정착
젠더폭력 방지 국가책임 강화

주요 내용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추진,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관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성과관리 강화

- 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 배치 등 정책추진체계 강화

(여성 대표성 제고) '17년부터 공공부문(관리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 관리자, 군 · 경찰 등) 여성 진출
대폭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 이행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성평등 교육 강화, 언론 · 미디어 종사자 및 공적 서비스 전달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젠더폭력 방지 기반 구축) '18년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및 국가행동계획 수립 · 이행을 통해 다
양한 젠더폭력 대응 강화

- 새로 대두되는 젠더폭력(스토킹, 온라인 성범죄 등)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17년~)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18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및 '19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연구소(가칭) 설치 · 운영

- '20년 피해자 역사관 건립을 통해 조사 · 연구사업 체계화

제3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20~2024)

기본 방향

(비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공정 · 포용
사회 구현

(목표) 여성의 경력유지와 역량개발을 위한
사회지원 시스템 구축

주요내용

-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
 - 출산 · 육아가 근로자 지원 강화
 - 일 · 생활 균형 제도 정착 위한 기업지원
 - 경력단절 예방 대책 내실화
 - 능력개발 및 성평등한 직장문화 확산

제5차['21~'25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목적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제고와 전문
인력화를 지원하여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사회 발전 도모

주요내용

- 양성이 평등한 농업 · 농촌 구현
 - 농업 · 농촌 성평등 인식개선 및 문화확산
 - 여성농업인 대표성 강화
 - 성주류화 정책 내실화
 - 정책추진 체계 강화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
 - 여성 취업 희망자 역량 강화
 - 여성 취업 지원 강화
 - 여성 창업 지원 서비스 강화
- 다변화되는 일·방식 영역 대응
 -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지원
 - 사회적경제분야의 여성 지원 강화
- 돌봄 지원 체계 강화
 - 맞벌이 가구·취업모의 자녀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 경력단절여성 정책 추진 체계 정비
 - 경력단절여성 지원 위한 전달체계 개선
 -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관련 : [제3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20~2024\)](#) 관계부처 합동
2020. 2. 12.
[2021년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행계획](#)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2021. 4. 16.

-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
 -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및 성인지적 교육체계 구축
 - 사회적 경제에서 여성의 역할 확대
 - 여성농업인 창업 및 경영지원
 - 여성농업인 지역사회 역할 지원
- 복지·문화서비스 향유 및 건강·안전 제고
 - 일·가정 양립 및 복지서비스 강화
 - 노동경감 및 지원
 - 건강 및 안전제고
 - 문화·여가활동 지원
-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
 -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 귀농·귀촌 여성 지원
 - 결혼이민여성 농촌인력 양성 지원
 - 다양한 계층의 여성농업인 활동 지원

관련 : [제5차\[’21~’25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2020. 12. 30.

참고 자료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20. 9.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21. 2.

[여성농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21. 4.

[여성농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21. 6.

[젠더 관점에서 본 코로나19 일자리 위기와 정책 대응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WD Brief」 2020. 8. 14.

코로나19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는 성인지적 정책은 무엇보다 일자리·소득 위기를 먼저 경험한 여성들의 빠른 피해 회복을 지원하여 현재의 위기가 노동시장 내 성별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단기 피해 회복 지원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성별화된 이중노동시장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 취약노동자를 배제해 온 노동법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

기 위한 정책 개선 작업을 추진해야 함. (...) 나아가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사회 변화,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이러한 변화가 성별 격차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고, 돌봄의 사회적 가치 제고와 공공성 강화 등 기존에 강조해 온 성평등 정책의 목표를 현실화시키는 적극적인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경력단절여성 현황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19. 8. 30.

주요 선진국의 여성고용률은 평균 70~80%를 상회하고 있으며, 연령별 취업은 우리나라처럼 M자형이 아닌 \cap 자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은 50% 내외의 낮은 고용률에 머물러 있으며, 30대~40대 초반의 뚜렷한 경력단절과 어린아이를 둔 여성의 낮은 고용률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성별 시간제 일자리 비율의 격차는 크지 않지만, 남녀 간의 큰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 우리나라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경력단절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30대~40대 초반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정책, 다양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시간제와 전일제간의 차별해소, 성별 임금격차의 해소, 일가정양립정책의 확대 등이 주요 정책적 과제로 도출된다.

여성의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 이행 현황 한국직업능력연구원 「KRIVET Issue Brief」 2021. 6. 30.

여성의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질수록 훈련 후 취업률이 1년 이상~ 2년 미만 62.0%에서 7년 이상~8년 미만 42.9%로 낮아지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경력단절은 노동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스킬의 퇴화를 발생시키며,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질수록 훈련 후 취업률이 낮아지고 취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을 위해 직업훈련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취업을 위한 훈련은 본인의 기존 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경력단절 초기에 사전 역량진단과 함께 맞춤형으로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상담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함.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2. 26.

이 연구는 통계분석을 통하여 여성농업인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확인하고, 기존 관련 연구와 제도 및 정책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실태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여성농업인들의 정책수요를 연령대별로 도출했으며, 연령에 따른 정책인지도와 영농활동 관련 정책수요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한 바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대한민국의 제8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8. 3. 14.

38.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이행하고, 특히 고용노동부의 성별임금격차 사례를 조사하는 역량을 크게 증대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배 시 엄격히 제재를 부과하고, 공공기업 및 민간기업 대상 '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할 것 (...) 인식제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혜택을 확대하여, 남녀의 육아 휴직 제도의 혜택 수준을 제고하는 등, 육아 의무를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고할 것. (...) 45. 농촌 여성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수행한 '여성어업인의 참여율 및 권리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이행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당사국이 농어업 조합에서 더 많은 여성 임원 임명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성평등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관련 :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우리나라 제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UN 사회권규약위원회 2017. 10. 19.

다. 국방개혁 2.0

개요

국방개혁 2.0은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조기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에 수립되었습니다. 이는 매 정부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해온 것과 맥을 같이합니다. 이와 동시에, 인구절벽이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상황적 변화와 안보위협 다변화 등을 고려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11월 본회의에서는 인구절벽 문제와 연계된 ‘병역자원감소’에 대응하는 내용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정책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국방위원회	<p>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등 11인)</p> <p>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은 병역자원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역규모를 감축하고 예비군의 비중을 높이고 있음. 특히, 동원 사단의 현역 편성률은 기존 대비 약 75% 감소하여 해당 부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예비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예비군 중 일부 인원을 연간 최대 180일까지 소집하여 동원부대의 주요 직위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 제를 도입하고, 퇴역한 군인도 선발되는 경우 예비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3조의3 신설 등).</p>	2021-11-11 (수정가결)
2	국방위원회	<p>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사유로 분할복무 하는 경우 복무 중단 기간을 최대 2년까지로 하고, 「예비군법」에서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소집기간을 연간 180일 이내로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는 경우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을 정지하고, 예비군 대체복무자가 복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p>	2021-11-11 (원안가결)

정책 동향

[100대 국정과제] 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국방부)

과제목표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국방개혁 핵심과제 재선정·추진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 및 군 사법 개혁 등을 통해 국방 체질 개선 추진

주요 내용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 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핵심과제를 재선정하여 ‘국방개혁 2.0’ 수립

- 상부지휘구조 개편 및 50만 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 인력구조 개편

(병 복무기간 단축)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손실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 추진

- 부족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전환·대체복무 지원인력 조정 및 장교·부사관 인력 확보 체계 개선

(국방문민화) 문민통제 원칙 구현을 위해 국방부·방사청에 대한 실질적 문민화 방안 마련 추진

(군 사법개혁) 심판관제도 폐지, 군판사 인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장병의 공정한 재판 및 인권 보장

(예비전력 정예화) 현역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검토,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

(군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 사업 지원) 군 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국방력 강화 및 주민 불편 해소

국방개혁 2.0

국방개혁 목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조기 구현

-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군
-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게 운영되는 군

국방개혁 추진 기초

- 주도적 방위역량 확충을 위한 체질과 기반 강화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적극 활용
- 국가 및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개혁 추구

내용

(군구조 분야)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이 가능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군구조로 발전

- 병력집약적 구조에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투에 효율적인 부대구조로 개편
- 굳건한 한미동맹 지속, 우리 군 주도의 지휘구조로 개편
- 전방위 위협에 대응 가능한 첨단전력 확보
- 병력 감소에도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방인력구조 개편

(국방운영 분야) 효율성·신뢰성·개방성을 통해 고효율의 선진화된 국방운영체제 구현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국방 전문분야에 적용
-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 병 복무기간을 단축
- 여군인력을 확대하고 근무여건을 개선
-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

(병영문화 분야) 국민 눈높이의 인권·복지를 구현하여 사기 충만한 병영문화 정착

- 선진 민주국가 위상에 걸맞은 장병 인권보호 강화
- 장병 복지향상 및 복무여건을 개선
- 장병과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의료서비스 제공

(방위산업 분야) 효율성·투명성·전문성을 강화하여 국제수준 경쟁력 확보

- 국제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위사업개혁을 추진

(국방예산) 적정수준의 국방재원을 확보하여 「국방개혁 2.0」을 성공으로 이끌

관련 : [국방개혁 2.0 소개](#) 국방부 2019. 2.

'22~'26 국방중기계획

주요내용

- 인력 및 부대구조는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
 - 전투부대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전환, 비전투부대는 전문 민간인력을 확대하는 등 인력 운용환경에 부합하도록 국방인력구조 설계
 - 병력과 부대 수는 줄어들지만, 첨단전력 도입과 연계한 첨단과학 기술 기반의 부대구조로 개편함으로써 전투력 강화
-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미래형 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빈틈없는 안보태세 확보
 - 전방위 위협 억제능력 강화
 - 국방개혁 2.0을 위한 작전적대응능력 구축
 - 미래주도 혁신적 국방 R&D 강화
- 사이버·테러·재난 및 질병 등 비전통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 확보
- 국방분야에 한국판 뉴딜을 적극 적용하여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확산하고 디지털 강군, 스마트 강군을 구현
- 군 복무기간에 대해 합리적 보상을 하고 복무기간을 사회와 단절되지 않은 생산적 시간으로
- 의식주를 포함한 군 생활 전반의 병영환경을 국민과 장병 눈높이에 맞춰 개선

관련 : [미래를 주도하는 강군을 건설합니다.\(2226 국방중기계획\)](#) 국방부 2021. 9. 2.

참고 자료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국방위원회 2021.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국방위원회 2021. 8.

[「국방개혁 2.0」의 평가와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0. 2. 6.

「국방개혁 2.0」은 현존 위협에 대한 인식, 개별 개혁과제별 추진속도와 범위의 선택적 제시, 군의 문민화 및 정치적 중립보장 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군사전략의 수립, 병렬적 나열식 개혁과제 제시, 국방개혁과제의 연속성 확보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함. (...) 첫째,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함으로써 이에 대해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군사안보체제의 확립이 필요함. (...) 둘째, 위협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군사력의 건설을 요구받고 있음. (...) 셋째, 과학기술의 발달과 무기체계의 질적 제고,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적용으로 국방 및 전쟁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군사교리의 발전을 요구하고 있음. (...) 넷째, 미래 국방인력 확보 전망을 예측해내고, 확보된 인력의 숙련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함.

「국방개혁 2.0」의 정예군: 전략적 방향성과 기술적 디테일의 부재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0. 10. 28.
현재 『국방개혁 2.0』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는 전략적 방향성과 기술적 디테일이다. 어떤 위협부터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전략적 방향성은 정치권의 결단이 없으면 설정할 수 없으며, 기술적 디테일은 전투현장과 개발/제작팀의 융합이 없으면 달성될 수 없다. 기술과 전술, 그리고 정치가 결합되어야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방개혁 2.0』이 완성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초점을 둔 정책추진이 요구된다. 1. ‘국방개혁’의 개념에 충실한 접근 (...) 2. 한반도 환경에 적합한 방향성 설정 (...) 3. 기술발전과 전쟁수행 방식의 괴리 극복.

국방개혁 2.0 평가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8. 8. 30.

<국방개혁 2.0>에는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군 사법제도 개혁, 인권 존중의 군 문화 조성,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군 의료시스템 개편 등 긍정적인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국방개혁 2.0>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에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기본 방향과 대부분의 과제가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 정작 중요한 과제들은 빠져 있기도 함. (...)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공격적인 군사 전략 유지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일 수 있음. >방위사업 개혁 과제 미흡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라. 강제적 섯다운제 폐지

개요

‘강제적 섯다운제’는 인터넷게임 서비스 업체들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연령인증 및 본인 인증을 통해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강제로 원천차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011년에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자 도입되었고,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 등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우위를 두어 정책적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새로운 게임매체로 강제적 섯다운제를 확장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정책 기조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번 11월 본회의에서는 이러한 강제적 섣다운제를 전면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정책과는 부응하지 않지만 새로운 기조와는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여성가족위원회	<p><u>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u></p> <p>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게임 중독·과몰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중독과 과몰입을 병기함(안 제3장).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친권자등 대상 고지 항목 중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삭제함(제25조 제1항 제2호 삭제).</p> <p>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및 이를 위반하여 게임을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함(제26조 및 제59조제5호 삭제). 조 제목에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의 예방을 명시하고,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가족까지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제1항).</p>	2021-11-11 (원안가결)

정책 동향

[100대 국정과제]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여가부)

과제목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조기 발견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국제교류, 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참여 활성화

주요 내용

- (학교밖 청소년 지원) '21년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체 시군구 확대로 접근성·지원기능 강화
-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생애주기별 각종 위기에서 예방부터 보호·치료까지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 업무 연계·통합 추진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청소년 복지시설 확대 및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확충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상담·치유 지원 전담상담사 및 근로보호 현장도우미 등 확대
-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시설 퇴소 아동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득·주거·자립지원 강화
 - 시설보호에서 가정 내 보호로 정책 방향 전환, 통합사례관리 시범운영
- (전담공무원 배치) 시도 등에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 배치 확대
- (청소년 역량 강화) 청소년 활동 및 자원봉사 운영 내실화,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확대

게임 섯다운제 폐지 기초

여가부는 현재 모바일 게임 섯다운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뉴시스, 서울신문, 뉴스1 등 2019.10.23 일자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보도에 대한 설명> 여성가족부 2019. 10. 23.

여가부, 섯다운제 개선 방안 적극 논의 여성가족부 2021. 7. 6.

섯다운제 개선, 여가부 자체규제개혁위원회 통해 적극 논의 여성가족부 2021. 7. 30.

게임 섯다운제 폐지, 자율적 섯택으로 과몰입 방지 유도 여성가족부 2021. 8. 25.

섯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게임문화 조성방안 여성가족부 2021. 8. 25.

정부 · 민간전문가 · 청소년이 함께 청소년 정책 방향 모색한다 여성가족부 2021. 10. 13.

참고 자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21. 9.

[게임 섯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세미나 자료집](#)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2021. 7. 13.

[청소년 인터넷게임 섯다운제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1. 8. 20.

첫째, 제도 도입 초기에는 섯다운제가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 및 이용시간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둘째, 섯다운제가 청소년의 수면행태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긴 어렵다. 셋째, 섯다운제가 게임 과몰입군 및 과몰입위험군 증감에 장기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결국, 청소년 인터넷게임 섯다운제는 제도 도입 직후에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 시간 및 이용시간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제도 자체의 한계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인터넷게임 시장의 축소 및 모바일게임 시장의 확대라는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은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인터넷게임 규제에 관한 법제개선 연구 - 강제적 섯다운제를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2014. 11. 22.

문제점으로는 동 제도의 법적실효적 측면에서 게임사업자에 대한 중복규제, 제도효과의 한계 및 청소년들의 규제회피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앞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반영한 개선방향으로는 동 제도의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부모의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관리 확대, 부처간 정책 충돌의 최소화 및 강제적 섯다운제의 실효성 확보를 제시하였다. (...) 인터넷게임 중독문제와 게임산업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제로섬게임의 관계가 아니라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가 해결되면 게임산업발전 역시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윈윈게임의 관계에 더 가깝다는 점을 유념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 [섯다운 정책 도입 전후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과 수면시간 변화에 대한 사용자 행동 데이터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STAT Report」 2019. 8. 30.

[오픈넷, 인터넷게임 강제적 섯다운제와 본인인증 의무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 2021. 9. 2.

이 사건 강제적 섀다운제 조항은 청구인 1의 문화향유권,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온라인상의 집회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게임을 할 권리,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침해하고, 학부모 청구인인 청구인 3, 청구인 4의 자녀교육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고, 이 사건 제한대상 게임물 지정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포괄적인 위임입법에 해당하여 헌법 제75조에 위반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본인인증 의무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 1, 청구인 2, 청구인 4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익명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위 청구인들은 귀 재판소가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 · (사)지평법정책연구소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최정호 선임연구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jhc@jipyong.com

지평 공공정책팀 · 지평법정책연구소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